

인천의 꿈, 대한민국의 미래

2016 주요업무계획

2015. 12.



인천광역시

<http://www.incheon.go.kr>

[규제개혁추진단]

목 차

I. 일반 현황	2
II. 2015년 성과와 평가	5
III. 2016년 정책여건과 목표	8
IV. 주요업무 추진계획	13

I . 일반현황

1 일반현황

□ 기 구 : 규제개혁추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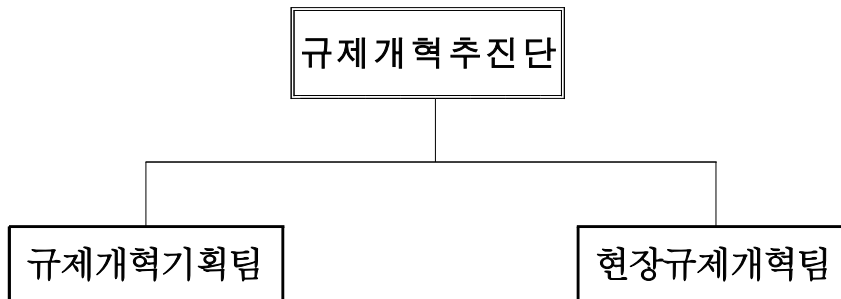
□ 인력(정/현원) : 12/12명(일반직 12/12)

(‘16. 1. 1. 현재)

구 분	일반직							비고
	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
규제개혁추진단	12/12	1/1	2/2	4/4	4/4	0/1	1/0	

□ 조직표

(‘16. 1. 1. 현재)



□ 예 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	2016년	내역	
			물건비	사업예산
계	40	47	47	0
규제개혁추진단	40	47	47	0

2 주요 현황 및 통계

□ 위원회 현황

위원회명	설립일자	위원수			위원장	비고
		계	당연	위촉		
행정규제개혁위원회	98. 8. 10.	17	7	10	경제부시장	

□ 등록규제 현황

구분	계	기존규제	신설	누락	폐지	강화	완화	비규제 정비
2014년	430	114	8	298	48	5	5	61
2015년	428	114	9	288	51	5	12	61

□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(Off-Line)

구분	계	시	중구	동구	남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	강화군	옹진군
신고센터	13	3	1	1	1	1	1	1	1	1	1	1
시 : 규제개혁추진단, 민원실, 인천상공회의소 각 1개소 운영												

※ On-Line :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,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음부즈만 링크 (전국 공통)

II. 2015년 성과와 평가

1] 주요성과

□ 규제개혁 시스템 운영으로 중앙 현안규제 해소

[Two-Track 전략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]

-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한 Two-Track 성공사례
 - ※ 미단시티 고도제한 완화,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용도변경, 전국최초 무인도 개발 등
- 중앙부처 규제개혁추진부서를 통한 Two-Track 성공사례
 - ※ 경인아라뱃길 매표소·대합시설 설치 허용, 자전거 수리·대여소 설치 허용

□ 현안시책 발굴·해소

- 인천해안 군 철책 대체 추진을 통한 항구도시 인천의 가치 회복
- 식품위생법 영업 규제완화를 통한 푸드트럭 도입(4대) 및 확대

□ 불합리한 자체규제 (11대 분야) 해소

- 건축, 국토, 산업, 농업, 환경, 문화관광 등 11대 분야 자치법규 - 176건 중 147건 정비 (정비율 83.5%)

□ 「규제zero 출동반」 운영 등 기업애로 해소

- 북항배후단지 등 기업현장 방문 : 14곳 방문(53건 발굴)
 - ※ 남동공단내 공장 등록면허세 납부 편의를 위한 세무직 배치 등
- 규제신고센터 운영(13건), 설문조사(1회), 아이디어 공모(14건)

【회의체 개최를 통한 규제애로 해결】

- 규제개혁 실국 발굴 보고회 : 1회, 108건 발굴(중앙건의 50건)
- 국무조정실과 연계한 민간규제개선단 운영 : 2회, 25건
 - * 산업단지 조성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 완화 등 8건 수용
- 행정규제개혁위원회(규제심사 등) : 7회, 9건
 - * PCB업체 자가폐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등 8건 수용
- 현장규제조정회의 : 6회
 - * 산단기업 도시가스 인입관 도로굴착 완화 등 3건 수용

2 평가 및 개선방향

□ 평 가

- 인천만의 가치창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시책 사업 (인천해안 軍 철책 대체, 푸드트럭 도입) 발굴 추진
-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과 공동으로 규제개선간담회(2회)를 개최하여 다수의 지역현안 및 규제애로 해결
* 25건 중 수용7, 일부수용1, 대안1, 수용곤란5, 진행11
- 현장 목소리 반영과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규제조정회의 활성화(6회)와 산업단지 등 개별 입주기업의 현장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「규제Zero출동반」 구성·운영(2015. 1월~)
- 각 실국은 해당부처에 자체 건의하고, 규제개혁추진단은 중앙부처 (행정자치부·국무조정실) 규제개혁부서와 연계하는 Two Track 전략을 통한 협업체제 구축

□ 개선방향

- 「규제Zero출동반」 현장 운영시, 산단 등 기업애로 해결에 치중
⇒ 시민의 생활규제 발굴·개선을 위해 사회단체 등 방문현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업무확장 개선
- 다양한 사회계층 및 피규제 대상의 의견수렴과 규제발굴을 위한 시스템 미흡
⇒ 「민간규제개선단」 인력 POOL제 운영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필요
- 조직내 규제개혁 문화 형성·파급 및 시민체감도 미흡
⇒ 규제개혁 문화 파급을 위한 교육실시 및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지수 제고, 메일링서비스 방안 강구

Ⅲ. 2016년 정책여건과 목표

1] 여건과 전망

□ 2016년 규제개혁 정책여건

- (규제프리존 도입) 전국 단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맞춰 규제프리존 도입,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업종, 입지 등 핵심규제 철폐
 - ※ 14개 시도별 지역전략 산업 2개씩 선정(수도권 제외) : 부산(해양관광 IoT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) 등
- (융합규제발생) 융합 신산업 출현으로 시장진입 제고를 위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규제에 대하여 융합시 발생하는 규제 해소 필요
 - ※ 스마트홈, 바이오시밀러(바이오의약품 복제), IT물류 등
- (시정정책연계) 시정 8대 전략산업, 한중FTA 등 시정현안과 연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·해소
 - ※ 시정 8대 전략산업 : 자동차, 로봇, 바이오, 뷰티, 항공, 물류, 관광, GCF

□ 2016년 규제개혁 전망

- (일괄접근방식) 개별 건의사례 몇 건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제도의 일괄 재검토 등과 같이 일괄접근 방식의 규제개혁 시스템 예측
 - ※ 전문직종의 진입규제에 대하여 보편적 타당성하에 포괄적 접근 필요 등
- (사후규제방식)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처럼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필요
 - ※ 푸드트럭 도입시 사전허가보다는 사후규제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진입 보장
 - ※ 환경물질 위탁처리보다는 자가처리시설 설치 허용을 통한 사후규제 중점
- (자율경쟁유도) 전국 지자체별 규제지수(지도) 전면 공개를 통해 대국민에게 한눈에 알림으로써 지자체간 선의의 자율경쟁 유도
 - ※ 전국 지자체간 공장설립, 다가구주택신축, 창업·기업유치 지원 등 비교
- (시민체감도 제고) 규제개혁 내용의 대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혜그룹에 대한 맞춤형 홍보 전략 및 우수사례 전파
 - ※ 수혜 기업인 성공사례 언론기고, 지자체간 우수사례 공유 전파 등

2 정책목표

“투자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”

현안시책 해결을 통한
투자 및 고용 확대

- 1 인천해안 군 철책 대체 사업 추진
- 2 푸드트럭 도입 확대 추진

Two-Track 전략을
통한 중앙규제 개혁

- 1 중앙정부와 함께 하는 규제개혁 토론회
- 2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개선간담회

현장규제·숨은규제
Zero 추진

- 1 찾아가는 현장 「규제Zero출동반」 운영
- 2 숨은규제 찾아서 해결하는 「규제고충처리반」 운영

규제개혁 문화
형성·파급

- 1 규제개혁 교육 실시
- 2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지수 제고
- 3 규제개혁 설문조사
- 4 [가칭]규제레터 메일링서비스

불합리한 자치법규
정비

-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
- 2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

규제 발굴·해소를
위한 시스템 운영

- 1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
- 2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
- 3 민간규제개선단 확대·운영

3] 주요사업별 지표

□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)

시정 방침	주요 전략	추진사업명(주요과제)	신규/ 계속	사업기간	총사업비 (국비포함)	국가 지원
시민 중심 시정 실현	현안시책 해결을 통한 투자및고용확대	- 인천해안 군 철책 대체 추진	계속	지속	비예산	
		- 푸드트럭 도입 확대 추진	계속	지속	비예산	
		2개 시책	사업비 계		비예산	
	Two-Track 전략을 통한 중앙규제 개혁	- 규제개혁 토론회	계속	지속	5	
		- 규제개선간담회	계속	지속	비예산	
		2개 시책	사업비 계		5	
	현장규제· 숨은규제 Zero 추진	- 규제Zero출동반 운영	계속	지속	비예산	
		- 규제고충처리반 운영	신규	지속	비예산	
		2개 시책	사업비 계		비예산	
	규제개혁 문화 형성·파급	- 규제개혁 교육 실시	계속	지속	4	
		- 시민체감도 향상 규제지수 제고	신규	지속	비예산	
		- 규제개혁 설문조사	계속	지속	비예산	
		- (가칭)규제레터 메일링 서비스	신규	지속	비예산	
		4개 시책	사업비 계		4	
	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	-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	계속	지속	비예산	
		-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	계속	지속	비예산	
		2개 시책	사업비 계		비예산	
	규제발굴·해결 을 위한 회의체 운영	-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	계속	지속	비예산	
-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		계속	지속	4.8		
- 민간규제개선단 확대·운영		계속	지속	비예산		
3개 시책		사업비 계		4.8		

□ 세부지표

추진사업 (주요과제)	지 표	단위	2015	2016	2020
인천해안 군 철책 대체	○ 군 철책 대체	건	0	2	2
푸드트럭 도입 확대	○ 푸드트럭 설치 대수	개	4	15	10
규제개혁 토론회	○ 토론회 개최 운영	개최수	1	1	1
규제개선 간담회	○ 간담회 개최 운영	개최수	2	2	2
규제Zero출동반 운영	○ 출동반 운영	횟수	14	26	26
규제 고충처리반 운영	○ 고충처리반 운영 ○ 규제신고센터 운영	횟수 건수	0 13	10 15	10 15
규제개혁 교육 실시	○ 교육 실시	횟수	2	2	2
시민체감도 향상 규제지수 제고	○ 규제지수 제고 활동	횟수	1	2	2
규제개혁 설문조사	○ 설문조사 실시	횟수	1	1	1
규제레터 메일링서비스	○ 서비스 실시	횟수	0	52	52
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	○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율	%	83.5%	85%	90%
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	○ 등록규제 자치법규 감량비율	%	4%	3%	2%
규제개혁 발굴 보고회	○ 보고회 개최 운영	개최수	1	1	1
행정규제개혁 위원회	○ 위원회 개최 운영	개최수	7	8	8
민간규제개선단 확대·운영	○ 위원회 개최 운영	개최수	2	2	2

IV.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규제개혁추진단

- ① 현안 해결을 통한 투자 및 고용 확대
- ② Two-Track 전략을 통한 중앙규제 개혁
- ③ 현장규제·숨은규제 Zero 추진
- ④ 규제개혁 문화 형성·파급
- 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
- ⑥ 규제 발굴·해소를 위한 시스템 운영

1

현안 해결을 통한 투자 및 고용 확대

◇ 우리시 현안사항 중 규제개혁추진단 고유사무로 업무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, 시민이 행복한 인천 구현

□ 인천해안 軍 철책 대체 사업 추진

- 인천해안 軍 철책의 대체를 추진하여 **안보강화는 물론 투자·관광 활성화 및 친수공간 확보**를 통해 인천의 가치 회복
 - 사업대상 : 인천 연안(강화·옹진군 제외) 212km 중 63.6km 철책선
 - 우선대체 대상지 : 10개소 약 33.4km (전체 철책선의 52.5%)
 - * 북인천복합단지, 아암물류1·2단지, 경제자유구역 11공구 등 10개소
 - 사업주체·관리 : 市 총괄(대상지별 개발사업자 및 군구), 軍 관리
 - 추진계획 : 군 작전성 검토 및 대상지별 단계적 추진
 - * 2015. 12.~01. : 우선대체 대상지에 대한 제17사단의 군 작전성 검토
 - * 2016. 01.~ : 협의 및 대상지별 대체장비 설치 ('16년 2개소 대체)

□ 푸드트럭 도입 확대 추진

- 2014년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
 - 푸드트럭 규제,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'손톱밑 가시로 규정'
- 2016년 추진계획
 - 추진방향 : 청년창업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**생활안정방안 강구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푸드트럭 도입 확대 추진**
 - 「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」 신설과 현황조사 등 실시
 - 푸드트럭 확대설치 계획대수 : 15개
 - * 2015년 푸드트럭 설치 대수 : 총4대(아라뱃길2개, 연세대학교국제캠퍼스 2대)

- ◇ 해당 실국에서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,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개혁추진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Two-Track 전략을 구사

□ 중앙정부와 함께 하는 규제개혁 토론회

- 우리시 현안규제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함으로써 현안 해결
 - 시 기 : 연 1회 * 행사부와 공동주최 끝장토론회 활용 가능
 - 참 석 :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, 건의기관, 전문기관 등
 - 진 행 : 강연, 주제발표, 토론, 우수사례 발표 등
 - 과 제 : 해양·항공분야, 관광분야 등 우리시 현안 중앙규제

	주요 중앙규제	비고
1	시정 8대 전략산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	
2	공항 자유무역지역·항만배후단지 공장 신·증설 허용, 강화·옹진 수도권 제외 등	
3	규제완화 시범지구 등 IFEZ 활성화를 위한 규제	
4	'경인아라뱃길 활성화'를 위한 규제 (검암역 역세권개발사업 GB해제 등)	
5	섬 개발 등 '인천만의 가치창조'를 막는 규제	
6	인천공항내 항공정비산업(MRO) 등 '항공산업 제약' 규제	
7	시내면세점 확대, 케이블카 등 '인천관광 활성화' 규제	
8	중국대학 유치, 중국인 단체비자, 한중항로 등 인차이나 관련 규제	

□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개선간담회

- 우리시 민간규제개선단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대상 과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단과 연계하여 규제 해결
 - 시 기 : 연 2회 (상·하반기 1회)
 - 주 최 : 인천광역시
 - 안 건 : 민간규제개선단에서 건의한 중앙규제
 - 참 석 : 국무조정실, 민간규제개선단 등
 - 진 행 : 안건발표, 토의 등

3

현장규제·숨은규제 Zero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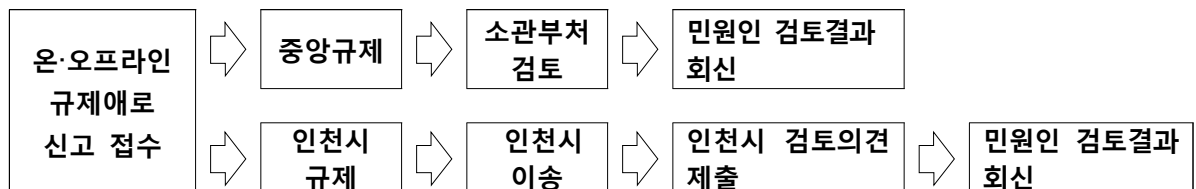
◇ 현장에 부딪히는 현장규제와 해묵은 숨은 민원규제를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규제개혁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

□ 찾아가는 현장 「규제Zero 출동반」 운영 활성화

-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이나 시민단체의 규제애로를 청취·해결함으로써 기업활동이나 시민불편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
 - 운영 : 연중
 - 출동조직 : 총괄(규제개혁추진단장), 출동반장(현장팀장), 반원
 - 출동현장 : 산업단지, 개발사업현장, 시민단체(협회) 등
 - 대상규제 : 기업규제 뿐만 아니라 생활규제 등 다변화 도모

□ 숨은규제 찾아서 해결하는 「규제고충처리반」 운영 [신규]

- 복지부동,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및 과도한 인·허가 조건부여 등으로 미해결 고질 규제민원 찾아서 적극 해결
 - 민원접수 : On/Off Line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민원
 - * 규제개혁신문고,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
 - 운영조직 : 총괄(규제개혁추진단장), 운영반장(현장팀장), 반원
 - 내용 : 규제민원에 대한 검토후 해당부서 권고, 후속조치 점검
 - 업무처리도



◇ 규제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방향과 정책 등을 함께 나눔으로써 규제개혁의 문화 조성 및 파급 도모

□ 규제개혁 교육 실시

- 기 간 : 연 2회 (상·하반기 1회)
- 대 상 : 시, 군구, 출자·출연기관
- 내 용 : 규제개혁 방향, 규제법령 정비 및 우수사례 소개
- ※ 인재개발원 규제개혁 교육(전문교육1, 사이버 교육1) 실시

□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지수 제고 [신규]

- 지자체별 규제상황을 알리는 규제지수가 공개됨에 따라 제고 강구
 - 규제지수 : 기업 체감도 조사 + 경제활동친화성지수
 - 제고방안 : 군·구 담당자 교육을 통한 규제지수 향상 도모
 - 기업체감도 : 기업대상으로 규제개혁 홍보 및 사례전파 등
 - 경제활동친화성 : 해당문항별 조례완화 개정, 설문작성 등

□ 규제개혁 설문조사

- 인·허가 등으로 겪은 애로사항을 직접 언급하기 어려운 기업 및 既 신고고객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·해결·환류
 - 설문실시 : 연 1회 (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)
 - 설문대상 : 최근 2년이내 인·허가 기업체 등 400여개
 - 설문내용 : 현황, 규제애로 경험, 실태 및 사례, 제안, 만족도 등

□ (가칭)규제레터 메일링서비스 [신규]

- 피규제 대상자에게 유익한 규제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메일링함으로써 공유의 장으로 활용
 - 메일링 대상 : 기업체, 민간규제개선단 POOL(67개 협회·단체) 등
 - * 해당기관의 사무국장급 인사의 메일주소로 메일링
 - 메일링 주기 : 주 1회 (필요시 수시)
 - 메일링 내용 : 규제관련 행사·회의, 우수사례, 규제정보, 보도자료 등

5

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

- ◇ 불합리한 규제법규 등을 정비하여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편의 제공하고 자치법규의 법적합성·실효성 제고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

□ 불합리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 등) 정비

-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등록규제 발굴 정비
 - 각 부서별, 군·구별 정비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 실시
- 2015년 발굴과제 중 미정비과제 지속적 정비 추진

※ 2015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현황(2015.11.30.기준)

- 중앙부처 발굴 현황

계	분청	중구	동구	남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	강화군	옹진군
176	45	12	7	9	8	11	8	12	8	37	19

⇒ 정비 실적(입법예고 이상) : 정비율 83.5%

계	분청	중구	동구	남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	강화군	옹진군
147	35	11	5	7	7	9	8	8	7	32	18

□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

-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자치법규 등록 및 정비
 - 2015년 12월말 기준 등록규제에서 3% 감량 계획
- 규제가 신설·강화될시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심사 실시

※ 등록규제 정비현황

- 등록규제 규제통합시스템 등록현황 (2015.11.30.기준)

계	분청	중구	동구	남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	강화군	옹진군
1,683	428	124	115	114	104	136	114	129	119	159	141

- 2015년 등록규제 정비(폐지·완화) 건수 : 85건

- ◇ 규제 발굴·해결 메커니즘으로서 회의체를 기능별 운영함으로써 의견을 검토하고 부서간 조정, 개선권고 등을 통해 규제 해소

□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

- 실국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장님 주재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규제애로 해결
 - 시 기 : 연 1회
 - 참 석 : 시장, 부시장, 실국장, 부군수·부구청장 등
 - 진 행 : 규제과제 발표, 토의 등
 - 조 치 : 자체규제 해결 및 Two Track을 통한 중앙부처 건의

□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

- 조례·규칙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통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철회 또는 개선권고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
 - 주 재 : 경제부시장
 - 참 석 : 총 17명(내부위원 7명, 외부위원 10명)
 - 기 능 : 조례·규칙 규제심사, 기업규제 애로사항 심의·개선권고 등
 - * 현장규제조정회의와 연계하여 부서간 이견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 상정

□ 민간규제개선단 확대·운영

- 다양한 사회계층 및 피규제 대상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 규제개선단 운영함으로써 시민체감 규제개혁 실현
 - 시 기 : 연 2회 (상하반기 1회)
 - * 규제건의는 분기별 1회, 개최는 반기별 1회 (국무조정실과 공동주최)
 - 구 성 : POOL제 운영(관내 67개 기관 단체·협회)
 - * 규제과제를 건의한 기관이 회의 개최시 참석하여 발표·토의
 - 성 격 : 건의, 자문, 협업 등
 - 조 치 : 자체규제는 소관부서 해결, 중앙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